

Regionalism in East Asia

TAGA Hidetoshi(Waseda University)

A Background Paper

필자는 1980년대에 ‘환일본해 연구회’를 조직했다. 이 연구회의 활동은, 이후 환일본해 학회 (현, 동북아시아학회)의 시조가 되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환일본해 경제권’이라고 하는 언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해양을 중심으로 국경을 초월한 국제사회단위는 경제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지역의 안정과 평화, 환경, 이문화간의 교류 등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목적이다. 경제는 그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은 냉전의 종식후 일본해와 연관이 있는 자치단체와 체계는 ‘러시아의 자원, 중국과 북한의 노동력, 일본과 한국의 자본 및 기술력 등의 세 가지 결합에 의한 경제권의 창출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UNIDO의 두만강개발계획도 그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필자는 당시 환일본해 경제권이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것은 2010년 정도로, 그때까지는 시민간의 교류와 자치단체간의 협력에 의한 확고한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주장은 “너무나 이상적이다,” “경제가 주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지방이 아닌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등등의 비판과 지적을 받아왔다. 필자의 예상은 적중되기도 하고 빗나가기도 했다. 예상이 적중한 것은, 바다건너편 에서도 일본의 체계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었다. 우선은 ‘풍족한 경제’ 라고 하는 발상이 크게 유행했다. 눈앞의 이익을 내기 위한 중고차 수출 등이 크게 유행했다. 예상의 어긋난 것은 그 시절부터 수출해온 기업 등은 극소수만을 제외하고 절반 이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의 예상이 가장 크게 들어맞은 것은 2010년을 앞두고 가까스로 본격적인 경제관계의 변동이 있을 것 같은 징조가 있다는 것이다.

극동 러시아 지역의 활성화

지난해 말부터 언론에 “환일본해 경제권”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다. 석유가격의 급등으로 러시아 일부에서는 엄청난 부유층이 탄생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표면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까지 러시아 연방정부가 지출을 망설이고 있던 ‘극동 바이칼지역 경제사회개발계획’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다. ‘환일본해경제권’의 재등장은 러시아가 극동개발에 본격적으로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2년의 APEC 총회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는 이 관측에 신빙성을 더한다.

지방자치단체와 동북아 경제권의 발전

일본과 러시아의 시장회의는 긴 역사를 갖고 있다. 그리고 ‘동북아시아 자치단체연합’은 새로운 시대의 연계이다. 일본과 러시아 연안시장회의는 1970년에 시작되어 현재 일본의 21개 도시와 러시아 17개 도시에서 2년에 한번 일본과 러시아가 개최도시를 바꿔가며 폭넓은 의제를 토의하고 있다. 초기에는 일본은 ‘경제교류’, 러시아는 ‘친선’이 핵심 사안이었다. 하지만 회의를 거듭하면서 동시베리아의 에너지 개발에 가맹 자치단체가 어떻게 공동보조를 취할 수 있을까, 그리고 북방영토문제를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 등의 의제로까지 발전하였다.

환경협력

1992년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의 다섯 개 국가가 참가하는 ‘동북아시아 환경협력회의(NEAC)’가 시작되면서, 동북아시아의 국가 수준의 환경협력대화가 본격화되었다. 국제환경협회의 분야는 ASEAN이 동북아보다 앞서 있다. 하지만 최근 일본, 중국, 한국의 관계가 급속히 진전함에 따라 ASEAN과 동북아 삼국을 묶어주는 다국간 환경협력이 동아시아 전역에 퍼지게 되었다. 특히 ‘동아시아 산성비 모니터링 네트워크(EANER)’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ANET는 아시아 각지의 산성비 데이터 축적과 대기오염 정황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93년 전문가회합이 개최되었고 1988년에는 모니터링이 실시되었다. 2001년 보다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었으며, 2007년 4월 현재 동아시아의 13개국이 참가하고 있다. ‘동아시아 산성비 모니터링 네트워크’의 최대의

업적은 지금까지의 산성비 측정에 통일된 기준이 없었던 동아시아 지역에 측정 태세를 포함해 기준을 마련한 점이다.

지방정부의 보완적 역할과 대항적 역할

자치단체외교는 중앙정부의 외교를 보완 또는 이에 대항하는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외교는 자매도시 제휴, 의약품지원, 식품지원, 비핵도시 선언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2001년 역사교과서 문제로 인해 일한관계가 악화되었을 당시, 일본에 대해 반일적 입장을 고수하던 한국정부는 지방자치단체는 교류를 지속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복수의 채널은 중층적인 지역주의의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